

ZOOM
-IN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위해 주요 교역국과 핵심 품목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보복 관세 및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의 방침으로 대응하면서 무역 갈등이 격화
- 격화된 무역 갈등에 경계감이 확산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촉진되고, 수요변동성 확대, 물류 차질 등 부정적 영향이 부각
- 또한 공급망 재편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글로벌 물가에 구조적인 상방리스크를 형성하고 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공급망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2025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위해 주요 교역국과 핵심 품목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
 -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자국 산업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자국 중심의 양자협상을 선호
 -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대중국 고강도 제재를 지속하고, 한국, EU, 일본 등 우방국에도 특정 품목에 대해 무역적자를 이유로 관세 압박을 시행
 - 2025년 2월 초 미국의 3대 교역국(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시작으로, 4월에는 관세 부과 대상국을 모든 교역 국가로 확대
 - 『무역확장법』 제232조, 『통상무역법』 제301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등을 근거로 관세 인상을 발표
 - 2025년 2월 불법 채류와 마약 유통으로 인한 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해당 원인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있다고 지목하며 관세를 부과
 - 2025년 4월 모든 교역국가에 대해 10% 기본 관세(4월 5일 발효)와 더불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4월 9일 발효) 행정명령을 발표
 - 다만, 4월 10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7월 9일까지 유예하였고, 7월 중 유예 만료 시한을 8월 1일까지 한 차례 연장

□ 이에 따라 중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보복 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의 방침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

-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145%의 관세 부과에 대해 일부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 부과로 대응
 - 이후 5월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또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하향 조정
- 캐나다는 자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며 3월 초 30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단계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분쟁 협의를 신청
 - 이후 미국이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의 대부분을 1개월 유예하자, 2단계 추가 보복 관세 부과(1250억캐나다달러 규모) 시행은 연기
- 그 외 다수 국가들은 보복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협상을 제안
 - 베트남, 대만 등은 미국산 수입관세 0%를 제시했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항공기 수입 확대를 제시¹⁾

〈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관련 주요 타임라인

발표	내용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2월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10~25%) 발표
2월 4일	중국(10%) 보편관세 적용 시작, 멕시코·캐나다 1개월 유예 중국 연료·공산품 보복 관세 부과(2.10~)
2월 10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부과 발표
3월 3일	중국(추가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중국, 미 농축산물 추가 관세 부과 및 일부 미국기업 전략 물품 수출 통제(3.10~)
3월 4일	캐나다(25%), 멕시코(25%), 중국(10%+10%) 추가 관세 부과 개시
3월 5일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USMCA 적용) 한정 1개월 관세 유예(~4.2) - 캐나다(온타리오주) 미국 수출 전기 25% 추가 요금 부과(3.10)
3월 12일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253개에 25% 관세 부과 시행
3월 24일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국에 대해 전 품목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서명
3월 26일	수입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

1) 국제금융센터, 2025. 4. 10,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 동향 및 미국 경제영향 점검.

〈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관련 주요 타임라인(계속)

발표	내용
4월 2일 “Liberation Day”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발효
	상호관세 발표
	- 보편관세 10%, 한국 25% 상호관세 부과 - 보편관세, 기존 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 추가 적용 대상 제외(중복X)
4월 5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10% 보편관세 부과 정식 발효 -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예외 국가 제외
4월 9일	해당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발효 - 일시 연기된 국가 제외
4월 10일	중국 제외 70여 개국 상호관세 90일간 유예(~7.9) 중국 총 125%로 관세 인상 부과 즉시 발효
4월 11일	중국에 포함 145% 관세 부과 상호관세 90일 후 유예 연장 가능성 미정 발표
4월 13일	스마트폰, 일부 컴퓨터, 전자제품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 부과대상 제외 발표
5월 12일	대중국 관세율 145%에서 30%로 하향 조정
6월 3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25% → 50% 인상 행정명령 서명(6.4 공식 발효)
7월 7일	무역상대국들에 상호관세 적용을 위한 관세율 서한 순차적 발송 상호관세 유예 만료 기한을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

자료: 인천연구원,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저자 재작성

□ 격화되는 갈등에 경계감이 확산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수요변동성 확대, 물류 차질 등 부정적 영향이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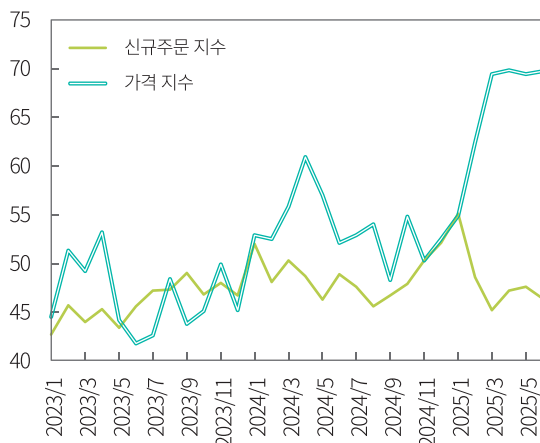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전·후로 상품 수요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공급망 상황 변화가 관측
- 관세 인상 전인 1~3월 중 가계의 선구매 증가, 기업들의 재고 확보 등으로 2025년 1분기 미국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급증(2024.12월 10.5%→ 2025.1월 24.1%→ 2월 20.5%)하며 일부 물류 경로에서 정체 발생²⁾
 -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근 ISM 제조업 가격지수는 급격히 상승했으나 신규주문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양상을 띠는데 이러한 괴리는 기업들이 수요 증가 없이 원자재 비용 상승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수입 재료의 비용이 상승하고 신규 주문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불균형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³⁾

2) 국제금융센터, 2025. 5. 12,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급망 추이 및 시사점.

3) 유진투자증권, 2025. 7. 8, Asset Cycle & Trend 달러와 금리의 엇박자.

- 무역상대국 및 기업들은 관세 회피를 위한 교역 경로 변경 및 생산기지 이전과 같은 교역전략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대미 직접 수출을 줄이면서 제3국 경유 재수출과 유럽·신흥국 시장 공략 등 수출 경로를 다 변화
 -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 생산 거점을 베트남, 인도 등으로 이전⁴⁾
- 특히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경우 동남아시아를 경유한 우회 수출이 대폭 확대⁵⁾
 - 2025년 5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43% 감소하였고, 이를 상품 가치로 환산하면 150억달러 규모
 - 베트남을 경유한 미국행 수출은 5월 전년동월대비 30%(34억달러) 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 경유 수출도 25%(8억달러) 증가
- <그림 2>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GSCPI)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상승 추세가 존재하며,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202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0 이상을 기록
 - GSCPI가 0보다 큰 경우 공급망의 병목 현상, 운송 지연, 원자재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그림 1〉 ISM 제조업 신규주문 및 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그림 2〉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주 : 점선은 추세

자료: Bloomberg

4) BBC, 2025. 7. 7, How tariffs are shifting global supply chains.

5) Financial Times, 2025. 7. 7, China reroutes exports via south-east Asia in bid to dodge Trump's tariffs.

□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글로벌 물가에 구조적인 상방리스크를 형성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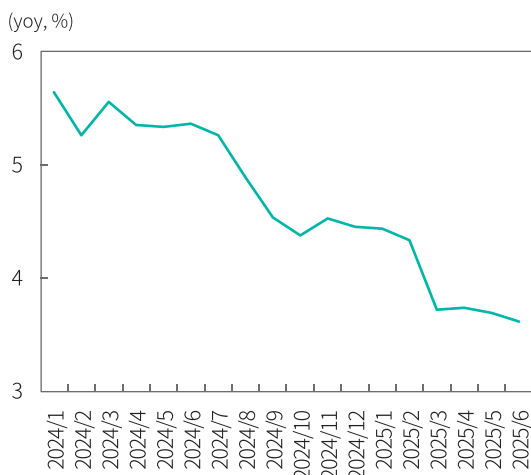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은 현재 제한적이나 향후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 존재

- 글로벌 인플레이션(전년동월대비, %): 2025년 3월 3.72 → 4월 3.74 → 5월 3.69 → 6월 3.62

—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처 확보, 생산기지 이전, 물류 경로 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비용 증가는 최종 제품 가격 상승 유발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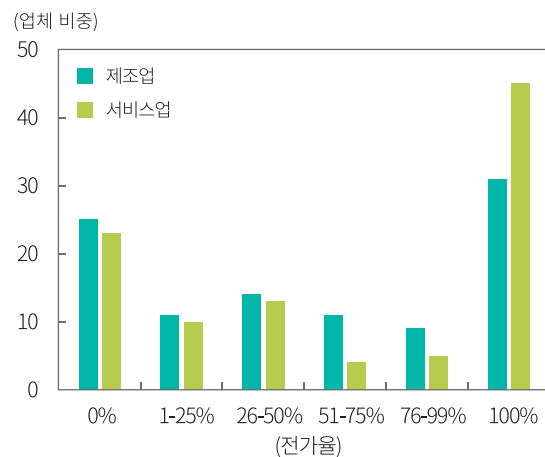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입은 손실이 340억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⁶⁾
- 뉴욕 연준이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고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기업체 조사(2025년 5월)의 결과, 75% 이상의 업체가 관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응답⁷⁾
- 미 연준 보먼 부의장은 “무역 협상의 결과로 관세가 인상되거나 기업들의 관세 부담 전가로 상품 가격을 인상할 경우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공급망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무역 패턴의 변화로 인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⁸⁾

〈그림 3〉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그림 4〉 기업들의 관세 부담 전가 비중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6) Reuters, 2025. 5. 30, Trump's tariff tally: \$34 billion and counting, global companies say.

7)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2025. 6. 4, Are Businesses Absorbing the Tariffs or Passing Them On to Their Customers?

8) BIS, 2025. 7. 1, Michelle W Bowman: Unintended policy shifts and unexpected consequences.

□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세계 무역 및 경제 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

- OECD는 고율의 수입관세, 글로벌 조달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 등에 따라 공급망이 재현지화(해외에 생산시설을 둔 기업의 본국 회귀)될 경우 상호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 비해 세계 무역이 18%, 글로벌 실질GDP가 5% 이상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⁹⁾
 - GDP 감소폭은 국가별로 자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돼 있는 정도 및 특징에 따라 최소 1.1%에서 최대 12.2%에 이를 것으로 분석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공급망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미국과 세계 각국의 무역 협상 진행 상황, 관세율 변동, 새로운 수출입 규제 도입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

선임연구원 장효미

9) OECD, 2025. 6. 2, OECD Supply Chain Resilience Review Navigating Risks.